

7월 재보선 시기 조정... 여야 이견 “없던 일로”

새누리 “6월 지방선거와 함께 치르자”

민주 “논의 불가... 정당공천 폐지 집중”

급물살을 탈 것 같았던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일정 조정이 여야의 의견 차이로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는 선거비용 절감 등을 위해 7월 재·보선을 통해 예정된 다른 선거와 둑어 치르도록 일정을 조정하는 데 의견 접근을 봤다.

우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선거가 너무 잦다. 7월 재·보선은

장을 조정하는 것 자체에는 의견 접근을 이뤘지만 6월 지방선거 때로 앞 당길지 10월 재·보선 때로 미룰지 시기를 두고 합의를 못 봤다는 해석이 주조를 이뤘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날 오후 “당의 공식 입장은 이 문제를 논의할 수 없다는 것”이라며 여당의 제안에 대해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히며 상황이 급변했다.

박광운 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굳이 조정한다면 7월 재·보선은 10월로 조정하는 것이 합리적일 수 있다”면서도 “지금 이를 논의하는 것은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공약과기를

불타기 하려는 것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이 시점에는 정당공천 폐지 논의에 집중하는 것이 옳다”라며 “당내에 이와 관련해 어떤 이견도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기자들이 “당의 입장이 오후 들어 바뀐 것 아닌가?”고 질문하자 “오전에는 전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최 원내대표의 제안에 원론적 차원에서 답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결국 정치개혁 특위에서 정당공천 폐지 이외의 논쟁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이 민주당의 일관된 주장”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의 최종 결론은 기초공천 폐지 문제와 재·보선 시기조정의 두 마리 토끼를 쫓다가 결국 아무 것도 행기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공천문제에 선택·집중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여야는 다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두고 잔반 논쟁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정당공천 유지를, 민주당은 폐지를 주장하며 한 치의 양보도 없이 맞서는 상황이어서, 국회 정치개혁 특위 활동시환이 끝나기 전까지 합의점을 찾기는 쉽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난 18일 미국 뉴욕주 아이젠하워파크에 들어선 ‘위안부 결의안 기림비’ 사이에 광주시가 지난 2012년 건립한 ‘위안부 기림비’가 세워져 있다.

광주와 인연 뉴욕 ‘위안부 기림비’ 옆 상·하원 ‘결의안 기림비’ 건립 화제

미국의 심장부 뉴욕에 지난 18일 건립된 ‘위안부 결의안 기림비’와 광주시의 인연이 새겨져 있는 것은 이 기림비가 유일하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당시 KAPAC 위원회(KAPAC)에 따르면, 미국 뉴욕주 낫소카운티 현충원인 아이젠하워파크에 미국 뉴욕주 상·하원 ‘위안부 결의안’ 통과 기림비가 사상 처음으로 건립됐다. 이 두 개의 기림비에는 뉴욕주 상·하원을 통과한 각각의 결의안이 새겨져 있으며, 지난 2012년 건립된 ‘위안부 기림비’ 양 옆을 호위하듯 나란히 세워졌다.

강 시장은 “광주에서 건립한 위안부 기림비 양 옆에 뉴욕주 상·하원 결의안 기림비가 세워진 것은 뜻 깊은 일”이라며 “일본의 진실어린 합회와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본의 만행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벌써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지난 15일과 16일 미국 상·하원을 통과한 일본 정부의 ‘위안부 결의안’ 준수를 촉구하는 내용이 담긴 2014년도 통합세출법안에 17일(현지시각) 정식 서명했다.

/홍행기자 redplane@kwangju.co.kr

朴대통령 인도 방문, 포스코 제철소 건설 급물살

마힌드라 “쌍용차 1조 투자”

인도를 국빈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과 만모한 싱 인도 총리의 지난 16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10년 가까이 어려움을 겪어온 포스코의 인도 현지 일관제철소 건설 프로젝트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한편, 노조는 20일 오후 1시까지 투표를 마감한다. 조합원(1290명) 중 과반(645명) 이상이 투표하고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전공노에가입할 방침이다. 전공노에가입하면 단체협상권과 사무실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중단할 방침이다.

노조와는 별개로 광주시도 정부로부터 각종 ‘페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크다. 일단 6000억원에 이르는 교부금과 정원 조정, 인사교류 등에서 불이익이 예상된다. 인행부는 특히 광주시가 노조의 투표 행위를 묵인한 정황이 있는 만큼 북인·방조 등의 책임을 따질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노조는 20일 오후 1시까지 투표를 마감한다. 조합원(1290명) 중 과반(645명) 이상이 투표하고 이 가운데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전공노에가입할 방침이다. 전공노에가입하면 단체협상권과 사무실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중단할 방침이다.

노조와는 별개로 광주시도 정부로부터 각종 ‘페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두 정상이 채택한 공동성명에서도 “양 정상은 포스코가 조속한 시일 내 프로젝트에 착수하기를 희망했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로써 포스코가 지난 2005년 6월 오디샤 주정부와 제철소 부지, 광권, 전용항만 제공 등의 내용이 담긴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120억 달러를 투입, 제철소 건설을 추진해왔지만 환경 청순, 주민 반대, 광권 분쟁 등으로 아직 착공조차 못한 이 프로젝트가 조만간 가시화될 전망이다.

또한 쌍용자동차의 최대주주인 인도 마힌드라그룹의 아난드 마힌드라 회장은 17일 향후 4년간 1조원 규모의 대(對)한국 투자를 약속했다. /연합뉴스

광주시공무원노조, 오늘 전공노 가입 여부 판가름

광역자치단체론 처음... 안행부, 불법행위 징계 파문 예고

광주시공무원노조의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가입 여부가 20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거센 후폭풍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강운태 광주시장이 지난 16일 비공개 간부회의에서 언급한 내용이 언론에 보도(광주일보 17일자 1면)된 것과 관련, 내부 정보 유출자의 색출을 시지하는 등 이번 투표가

이 현실화되면 안행부·광주시-노조 간 마찰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안행부는 이번 전공노 가입투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첫 사례인 만큼 노조 핵심 간부에 대해 강력한 징계 의사를 밝히는 등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자칫 법외단체인 전공노 가입 투표가 전국으로 번질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여기에 강운태 광주시장이 지난 16일 비공개 간부회의에서 “노조의 투표를 허락하고, 그 결과는 자신이 책임지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향후 징계 등을 놓고 안행부와 광주시 간 갈등 구조로도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안전행정부와 광주시는 일단 시노조가 민노총 산하인 전공노에 가입하면 단체협상권과 사무실 지원 등 각종 혜택을 중단할 방침이다.

노조와는 별개로 광주시도 정부로부터 각종 ‘페널티’를 받을 가능성이

“오피스텔” 매매

1. 수기동 제일 OP 13층 53평
2. 창가, 코너, 전망 좋음
3. 주거겸 사무실, 전체 올수리
4. 시세/분양가 – 2억 5천만원 정도
5. 매매가 – 1억 5500만원

경매투자

1. 특수비법 배우실 분!
배우면서 투자 가능
교육비 1,200만원
2. 경매에 투자 하실 분!
수익률 연 20% 보장
투자금 1억원 이상
3. 사무실 같이 쓰실 분!
컴퓨터등 정보 제공
연회비 1,200만원

(주) 오 천 경 매
H.P 010-3605-5000